

107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박근혜의 여성 노동자 차별·착취 강화에 맞선 투쟁을 지지한다

‘여성 대통령’ 취임 3년차를 맞는 여성 노동자들의 처지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정부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여성 고용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인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는다.

그러나 여성 취업자가 1천만 명을 넘어섰고 2009년 이후 여성 고용률이 상승 추세이긴 하지만 대단한 증가는 아니다. 2014년 여성 고용률은 49.5퍼센트 그쳤다. 한국은 여성 고용률이 남성보다 무려 20퍼센트포인트 이상 낮아 OECD 회원국 중 최고 격차를 기록하는 나라들에 속한다. 이것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높은 양육 부담** 때문이다.

2013년 이후 정규직 여성 노동자 수가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여성 노동자의 절반 넘는 수가 비정규직이다. 지난해 말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내용이었다. 노동자 계급 전체를 겨냥한 이 공격이 관철되면 가뜰이나 열악한 여성 노동자들의 조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KTX 여승무원 부당 해고를 인정한 판결을 파기 환송해, 비정규직 확대를 부추겼다. 대학 청소 노동자들도 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는 10년 째 1백만 원만 받아도 되는 노동자가 아니다”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13년 째 1위다. 여성 노동자의 임금은 남성의 63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대형마트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은 임금이 “10년 째 1백만 원”이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1년 일하나 10년 일하나 똑같은 저임금, 여전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민주노총 주최, ‘최저임금 여성 노동자 증언 기자회견’).

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은 여성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 때문이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여성 노동자들을 착취하면서도 가사와 육아의 부담은 개별 가정의 여성



“불안해서 못 살겠다” 고용안정·생활임금 쟁취 투쟁에 나선 대학 청소 노동자들

에게 떠넘기고, 여성의 노동을 부차적으로 취급하며 체계적으로 차별하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 반대

박근혜 정부가 역점을 뒀 추진한 여성 고용률 증대 정책은 고작 시간제 일자리 같은 저질 일자리 양산 정책에 불과했다. 시간제 일자리는 정부의 부추김 속에 증가해, 지난해 8월 전체 노동자의 10.8퍼센트를 차지했다. 시간제 노동자 중 대다수(71.1퍼센트)가 여성이다.

현재 시간제 일자리의 월평균 임금은 65만 원밖에 안 되고,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비율이 70퍼센트나 된다.

박근혜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정부 스스로 오히려 저질 시간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 얼마 전 경북교육청을 점거했던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산 증인이다. “학교측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기 위해 하루에 2시간 56분 일한 것으로 거짓 계약서를 작성해 왔다.” 이런 쪼개기 계약으로 노동법 적용을 피하는 꼼수를 쓴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그나마 남아 있는

양질의 일자리조차 시간제로 쪼개려 한다. 정부가 발표한 시간제 공무원 제도를 보면, 공무원연금도 받지 못하고 전일제로의 전환도 불가능하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일과 양육의 이중부담을 강요하고 여성 차별을 고착화하는 정책에 불과하다. 박근혜가 모범으로 치켜세우는 독일의 시간제 일자리는 “일을 하지 않는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했지만 전일제로 전환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고, 주로 전일제 일자리에 속해 있는 남성과 주로 미니잡을 채택하는 기혼여성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낳았다(민주노총, 〈시간제 일자리 확대 비판 정책보고서〉).

공공 보육 강화

정부는 규제 완화 정책으로 민간시설 공급을 확대하고 보육 시장화를 확대했을 뿐, 질 좋은 국공립보육시설을 늘리는 계획은 거의 내놓지 않고 있다. ‘무상보육’ 등 복지 공약도 예산 부족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박근혜의 보육 정책은 부유층 증세를

회피함으로써 노동자 계급과 여성들의 수요를 충족하지도 못하고 있고, 돌봄 직종에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강요로 서비스 질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 보육의 질을 높이려면 보육 노동자 처우 개선이 매우 중요하지만, 정부는 어린이집 구타 사건을 교사 개인의 자질 탓으로 돌리며 정작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지는 방치하고 있다.

경제위기 고통전가

경제가 침체할 조짐을 보이자 박근혜 정부는 남녀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짜려 혈안이 돼 있다.

올해 초 과장급 직원 1천 명을 구조조정 한 현대중공업은 이제 15년 이상 장기근속 여사원 6백여 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종용하며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려 한다. 여성 노동자들을 희생양 삼겠다는 것이다.

경제 위기의 고통을 여성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박근혜의 차별·착취 강화 프로젝트에 맞서 여성 노동자와 남성 노동자들이 단결해 투쟁하자.

민주노총이 4월 24일 총파업을 결정하다

여성 노동자들의 분노를 4·24 총파업 건설로 모아 내자

박근혜는 지지율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국민연금 개악의 전초전인 공무원연금 개악을 강행할 태세다. 오히려 이를 밀어붙이는 추진력을 보여 줘 핵심 지지층의 신임을 회복하려 한다.

박근혜는 설 직전에 민주노총을 배제한 ‘노사정’ 간담회를 열어, “청년 일자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 꼭 실현돼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실업 청년과 비정규직 고통의 책임을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리는 사악한 이간질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가 추진하려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은 전체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끌어내릴 것이다. 임금을 낮추고,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노후자금을 강탈해 자본의 비용을 줄여 줌으로써 말이다.

1997년 이후 국민총생산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떨어졌다. 노동자들이 창출한 부에서 그들이 실제로 가져가는 몫이 크게 줄고, 자본이 가져가는 몫이 늘었다는 의미다.

우리의 피땀을 더 빼앗길 것인지, 저들의 공간을 열 것인지는 우리의 투쟁에 달렸다. 돈이 없는 게 문제는 아니다.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만 5백 조 원이 넘는다. 국내총생산의 36퍼센트에 이르는 규모다.

이 점에서 민주노총의 4월 총파업은 단지



본격적으로 '박근혜와의 맞짱'에 시동을 건 민주노총에 지지가 모이고 있다.

조직 노동자들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삶을 건 중요한 투쟁이다.

반갑게도 금속노조, 건설노조, 전교조가 대의원대회에서 4·24 총파업 동참을 결정하며 결의를 모으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서울대병원 노조도 민주노총 4월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총파업을 실질적으로 성사시키도록 한달한시 모든 부문의 노동자들이 함께 파업에 돌입해 공장을, 관공서를, 마트를, 학교를 멈춰야 한다.

박근혜의 공격에 제대로 제동을 걸려면 4·24 총파업은 부문별 파업·점거·시위 같은 앞으로의 투쟁을 위한 도약대가 돼야 한다.

4월 총파업에 여성 노동자들의 동참이 중요하다. 여성 노동자들은 단지 박근혜 노동정책의 피해자가 아니라 이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투쟁의 주역이다.

부산·충남 방문건강관리사 해고 철회 투쟁, 경북 초등 돌봄전담사 투쟁 등 연초부터 벌어진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박근혜의 노동 정책을 폭로하는 구실을 했다. 대학 청소 노동자들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안정과 임금인상을 위해 투쟁을 벌이거나 준비 중이다.

오늘 3·8 전국 여성 노동자 대회는 박근혜 정부의 여성 노동자 차별·착취 강화 프로젝트에 맞선 여성 노동자들의 투지를 모으는 날이다. 여성 노동자들

과 남성 노동자들이 단결해 여성의 날 집회를 민주노총 4·24 총파업으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삼자.

노동자 정치 신문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 연대

구입하고 정기구독 · 후원해 주세요



대표전화 02-777-2792
기사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ws@wspaper.org
웹사이트에서도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wspaper.org>

여성 노동자에게 성희롱·괴롭힘 없는 일터를!

직장 내 성희롱은 여성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받는 중요한 차별 중 하나다.

현대차 사내하청, 르노삼성,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벌어졌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계약해지될까 봐 성희롱을 견뎌야 했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끝내 해고되자 이를 비판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근혜는 ‘4대악 근절’에 성폭력을 포함시켰지만, 윤창중 성추행 사건,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의 ‘별장 성접대 사건’,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경기보조원 성추행 등 지배자들 자신이 빈번하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저지르고 있다.

경찰은 ‘당신이 유혹하지 않았냐’며 피해 여성을 되레 범죄자 취급하기 일쑤고 재판 과정 역시 여성을 수치심과 고통으로 몰아넣는다.

그동안 기업주들은 성희롱을 한낱 ‘여성의 과민 반응’ 따위로 취급하곤 했지만, 성희롱은 결코 ‘예민한 여성의 과민 반응’이 아니다. 성희롱은 여성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근무 의욕도 심각하게 저하시킨다.



3월 3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여성 노동자에게 폭력 없는 일터를!' 캠페인

직장 내 성희롱은 주로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성 노동자들을 성적으로 괴롭히고 고용을 위협하는 일로 이어져 왔다. 특히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직 여성 노동자들이 성희롱의 피해자

가 되기 쉽다.

직장 내 성희롱은 근절돼야 한다. 여성과 남성 노동자들이 직장 내 성희롱에 맞서 함께 싸워야 하고, 노동조합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